

월요광장

센트럴파크를 동경하며



이봉수 현대계획연구소장

공원이라는 단어 '파크'(park)의 어원을 보면 '수목을 가꾸고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울타리를 두른다'라는 의미에서 비롯됐다고 한다. 따라서 이 단어에는 '공공'(public)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시민과 공공의 개념이 대두되고 공원이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면서 차츰 공원이 사용하는 장소가 됨에 따라 '공원'(公園, public park)이 되었다 한다.

도시공원은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그 원형을 갖추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근대에 이르러 권력자들이 도시를 지배하게 되면서 개인 소유의 정원을 갖춘 저택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시민혁명과 산업혁명 이후 봉건 왕후나 봉건 영주의 정원-수렵지나 저택이 역사적 유적지 등으로 시민에게 공개되고 그 지역사회의 공유지가 되면서 공원이 시작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도시에서 공원은 여러 가지로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최근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 문제로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공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도시 확산 방지, 휴식·운동이나 위락 공간 제공, 소음 완화, 미세기후 안정, 사회·심리적 활력 증진, 스트레스 완화, 쾌적성 향상 등과 같은 많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듯 환경 복지의 시대를 맞아 도시의 공원은 복지의 신념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적 형태로 기능해 왔으며,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쾌적한 환경과 사회적 편익은 공공의 복지 향상에도 기여해 왔다.

세계의 대도시나 유명 도시들은 그들만의 도시공원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인 아름다운 도시공원 몇 곳의 예를 들면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는 런던의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다. 런던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곳에 가면 비경경 공원의 경비를 볼 수 있고 보트를 타면서 공원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다.

뉴욕의 상징이자 세계에서 손꼽히는 도시공원인 센트럴파크(Central Park)는 맨해튼의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생겨났다. 프랑스 파리의 불로뉴 숲이나 영국 런던의 하이드파크처럼 시민들을 위한 열린 공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

라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광대한 숲과 산책로, 아이스링크 등의 운동 시설을 갖춘 세계적 관광 명소로 조성된 것이다. 이곳엔 연간 약 4000만 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리고 바르셀로나의 도시 풍경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공원인 스페인의 파크 구엘은 건축가 가우디가 디자인한 여러 가지 색다른 요소를 자랑한다.

시민을 위하여 '계획된 도시공원'이 공공기관에 의하여 만들어지게 된 것은 19세기 중엽부터인데,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최초이다. 종래의 공원은 귀족적인 색채를 강하게 풍기는 정원적 형태였다. 그러나 이 센트럴파크는 개인이나 특권을 위한 것이 아닌 다수의 도시민을 위한 시민의 공원이었다. 시민의 세금이라는 공공 기금으로 설립됐으며 시민의 보건 위생과 도시의 미관을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센트럴파크가 위치한 맨해튼의 도시 설계자였던 로버트 모지스는 이 구역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만들고자 설계에 매진하고 있었다. 이때 누군가가 조언을 했다고 한다. "만약 맨해튼의 중심부에 큰 공원을 설계하지 않으면, 5년 후에는 똑같은 크기의 정신병원을 지어야 할 것이다." 결국 삶의 휴식처를 놓지 않으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정신질환

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견이었다. 공원 안에는 인공 호수와 산책로가 있고 근처에 박물관도 많다. 그리고 야생보호구역도 있다. 2020년 미국 내 코로나19 사태가 뉴욕시를 거점으로 심화되면서 공원이 야전병원으로 쓰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공원은 이곳을 본떠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같은 이름의 공원이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도 있다. 흥대입구역 주변 경의선 숲길의 경우,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데다 내근근에 위치한데다가 이 공원의 이름을 딴 '연트럴파크'라는 별칭이 붙어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현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개발 계획이 확정돼 실행되고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 앞에서 언급한 공원들과 같이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요소들이 충족되어진 공원으로 만들어졌으면 한다. 뉴욕의 센트럴파크가 그렇듯 환경보존적 측면뿐만 아니라 지역민과 시민들, 전 국민이 와보고 싶은 전국의 명소, 세계의 명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어린 투자가 뒷받침되어야만 한다. 특히 시민들의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행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꿈꾸는 2040

위드 코로나 시대, 음식점의 생존 전략



차승세 위민연구원 이사

예전에 누웠던 모든 것이 그리운 시대다. 코로나의 습격은 수천 년에 걸쳐 만들어진 인류 문명을 송두리째 바꿔 놓고 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과 '경기 침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고 있지만, 수렴과 확산을 반복 중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신조어는 1:2·3이라는 단계를 만들어 조정하고, 급기야 소수점이 포함된 1.5단계 또는 준2단계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다. 거리 두기 단계를 높이면 경기가 위축되고 낮추면 경기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되나 이해하지 못할 것도 없다.

코로나의 확산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물뿌리 지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여러 업종 중에서도 음식점업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사람이 모이고, 음식을 섭취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기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업종이다. 인구 60명당 1개짜로 자영업업을 하는 기형적인 경제 구조 속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울고 있다.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 것인가.

우선 위드 코로나(with corona) 시대에 변화되는 생활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사회적 거리 두기는 상식이 될 것이다. 둘째, 손님들은 매장과 직원들의 청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다. 셋째, 예약제뿐만 운영되는 상점이 늘 것이다. 넷째, 비접촉 주문·결제 방식이 보편화 될 것이다. 다섯째, 배달이나 드라이브 스루·픽업 방식이 상용화될 것이다. 이런 다섯 가지 상황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임과 동시에 소비자의 니즈와 행동 패턴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소문난 맛집이 아니고서는 이제 시끌벅적하게 타인과 섞여 음식을 먹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것이다. 게다가 코로나의 장기화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 소비자의 지갑을 여는 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왜 그 음식점을 이용해야 하는지 새로운 이유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의 외면은 당연한 것이다.

완성된 음식만이 아니라 그 재료도 판매하는 식당이 있다. A빵집은 빵을 판매하는 것 외에 신선한 달걀과 우유 등 빵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판매하고 레시피를 무료로 공유한다. 재료와 경험을 공유하면서 충성 고객이 늘고 있다. 태국 요리를 판매하는 B음식점은 음식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를 판매한다. 음식을 먹어 본 고객이 집에서도 같은 요리를 할 수 있도록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을 한 곳에 담아 제공한다.

비대면 요구에 따라 디지털로 무장하는 식당들도 늘고 있다. 광주 광산구의 선운지구와 하남2지구 상가변영회는 코로나로 지역 상권 전체가 타격을 입게 되자 광산구청과 협업체하여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마트 시범 상가' 지원 사업 공모에 지원·선정되었다.

스마트 시범 상가 사업은 상인회·변영회 등 상권 내 상인으로 구성된 조직에 스마트 기술, 스마트 오더, 디지털 사이니지(Digital Signage) 등을 도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자체와 상인들 스스로가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위기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대와 협업'의 결과이다.

음식점 운영의 또 다른 변화 중의 하나는 배달 문화와 픽업 문화의 확산이다. 과거 음식 배달은 음식 섭취 공간이 없거나 손님을 매장에 유치할 수 없는 영세한 음식점들의 생존 전략이었다. 하지만 코로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기 위해 모이는 것을 통제시키고 대면을 줄이고자 하는 상황을 증가시켰다. 배달과 픽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다. 광산구는 배달·포장 시스템 도입을 어려워하는 상점을 대상으로 '배달 뉴스타트 교육 지원 사업'을 운영한다.

코로나 이전에는 맛있다고 소문나면 구석구석까지 손님들이 찾아갔지만, 언택트 시대에는 음식의 맛만으로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졌다. 식당에서 즐기던 음식을 집에서 요리하고자 하고,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상황을 피해 배달을 시킨다. 비대면 육구는 SNS에서 후기를 통해 미리 맛과 위생까지 점검한 뒤 매장에서 픽업해 가길 원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위기와 변화에 직면한 음식점의 생존 전략은 갈수록 다양해질 것이다.

社說

한가위 코앞인데 임금도 받지 못해서야

열흘 앞으로 다가온 민족 대명절 추석 을 앞두고 광주·전남 지역의 임금 체불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로 직장에서 해고돼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임금 체불과 해고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 을 미루는 악덕 기업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는 '지연 이자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는 물론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는 범죄 행위다. 따라서 당국은 명절 때만 이뤄지는 '반쪽 단속'에서 벗어나 상시 감독과 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 등 근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주 역시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1~7월 광주·전남 실업급여 수급자는 4만 5428명(3471억 원)으로, 지난해 3

만 8854명(2569억 원)보다 16.9% 증가했는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돼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난 것이다.

이처럼 임금 체불과 해고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솜방망이 처벌 규정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임금 지급 을 미루는 악덕 기업주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체불이 발생할 경우 법정 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해 신속한 변제를 유도하는 '지연 이자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 체불은 한 가정의 생계는 물론 노동자의 삶을 파탄 내는 범죄 행위다. 따라서 당국은 명절 때만 이뤄지는 '반쪽 단속'에서 벗어나 상시 감독과 악덕 사업주 처벌 강화 등 근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업주 역시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1~7월 광주·전남 실업급여 수급자는 4만 5428명(3471억 원)으로, 지난해 3

각종 비리 김홍걸 의원 물러남이 마땅하다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김홍걸 (57) 의원을 제명했다. 부동산 투기 등 제기된 의혹이 무겁고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제명 사유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 의원은 총선 때 3주택을 신고한 뒤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아내에게 증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전세금을 한 번에 4억 원 올린 사실도 알려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총선 전 재산공개 당시 10억 원이 넘는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4주택을 3주택으로 축소 신고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분양권이 있는지도 신고 대상인지도 몰랐다고 해명해 비난을 받았다. 시세 100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소득세를 135만 원밖에 납부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 되기 전 뚜렷한 직업도 없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형 김홍업 씨와 32억 원 상당의 동교동 사저를 두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법원은 지난 9월 11일 "김 의원이 혼자 사저를 처분해서는 안 된다"며 형인 홍업 씨 손을 들어줬다. 결국 집안 망신만 초래한 꼴이다. 오죽했으면 정의당이 그를 '호부견자'(虎父犬子)라며 비판했을까. '아버지는 호랑이인데 그 자식은 개'라는 뜻이니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그런데도 정작 김 의원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김 의원은 당에서 제명되기는 했지만 탈당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의정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당에서 사실상 '의원직 사퇴'를 의미하는 탈당을 종용했지만 김 의원이 거절하자 전격 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보여 온 지금까지의 행태는 너무나 파렴치하다. 지금이라도 의원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 더 이상 아버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어머니 이희호 여사의 얼굴에 먹칠을 해서는 안 된다.

無等鼓

진보와 보수 두 진영으로 갈라져 진흙탕 싸움을 이어 가고 있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인터넷 포털에 대한 국민의 선호도 역시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극명히 달라진다. 이는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다. 한 가정 내에서도 부자간이나 부부간에 선호하는 포털이 달라 갈등을 빚는 일이 드물지 않다.

포털별로 하루 방문자가 최고 수천만 명에 이르는 우리 현실에서 '첫 화면에 어느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는 기사가 우선 배치되는지, 그리고 어느 진영에 유리한 기사 가 더 많이 띄워져 있는

지하고 편집하기에 사람의 손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인공지능이 기사를 배치하고 편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은 사람이 만든다는 점이다. 사람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인공지능의 의사결정 방식을 처음부터 특정 방향으로 편향 시키거나 고정시켜 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포털 다음(daum)을 창업한 이재용 씨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공지능 시스템이니까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며 "어떤 가치 판단을 가지고, 어떻게 뉴스를 편집하도록 설계된 인공지능이 독립적으로 판단을 내린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우리 사회는 일부 포털의 뉴스 배치와 편집 방향 논란에서 촉발된 '민심 앵콜'과 '국론 분열'이라는 홍역을 치러왔다. 더 이상의 '역전 조작'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권력에서 독립된 특별위원회를 구성, 포털의 뉴스 편집 및 배치와 관련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설계도와 내용을 공개하고 중립성을 검증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홍행기 정치부장redplane@

알고리즘

기 고

아동 학대 예방 '부모 교육 의무화'부터



박근열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지난 6월 경남 창원에서 친모와 계부의 학대를 피해 배란다를 탈출한 9세 여아가 눈에 멍이 들고 온몸이 부은 채 발견됐다. 8월 서울 마포구에서는 친모의 학대로 가정에서 탈출해 편의점에 도움을 요청한 10세 소녀가 코피를 흘리며 맨발인 채로 발견됐다. 보호받아야 할 양육자에게 따뜻한 보호 대신 끔찍한 처벌을 받으며 탈출해야 할 상황에 처한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느껴진다.

지난 7월 29일 정부는 제11차 포용 국

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 20개소 확충, 2021년까지 학대피해 아동쉼터 10개소 내외 증설, 종사자 채용 개선 등이 담겼지만 보다 근본적인 아동 학대 예방 대책은 담겨있지 않았다.

아동권리보장원(구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2018 아동 학대 주요 통계'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가 76.9%로 가장 많았다. 또한 2017년 전국아동 학대 현황보고서를 살펴보면 학대 행위자 특성 중 모든 학대 유형에서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인다. 이는 아동 학대 방지 대책 중 부모 교육이 중요하고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사태로 전 세계에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우리는 언택트 사회를 준비해야 한다.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가정 내에서 부모·자녀 간의 생활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 양육 태도 및 아동 학대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해졌다.

전남서부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는 필자는 현장에서 많은 학대 행위자들과 상담을 진행한다. 그 과정에서 부모가 아이에게 가한 학대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타인이 자기 아이에게 하는 학대 행위에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경향을 많이 해왔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의 팔을 학 채가는 것은 아동 학대라고 부모가 느끼지만, 아이를 부모가 갖다 등으로 때리는 것은 훈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의 인식이 그대로 투영된 결과라 아닐까 생각한다. 이런 인식을 변화시키고 부모가 올바른 양육 가치관과 기술을 갖추고 아이를 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아동 학대는 사라지지 않을까 생

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부모 교육은 필수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아동 학대 예방 대책 중 아동 수당·혼인·출생 신고 시 학대 예방 및 부모 교육을 제공하고, 초·중고 학생 눈높이로 학대 신고와 대처 요령 등을 안내하는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하는 것이 포함됐다. 그러나 일회성 부모 교육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정부의 예방 대책으로는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아동 학대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해 '부모 교육 의무화'를 제안한다. 부모가 아동을 올바른 양육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예비 부모인 중·고등학생은 물론 가해 전력이 있는 부모를 위한 교육 체계를 세심하게 마련하여 '부모담'을 이해하고 아동 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기사·지국) (구독 신청·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